

###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이념과 공동체 구상 삼쌍둥이의 차별화 전략과 복지정치

The Similar Welfare Politics and Community Vision  
of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유범상\*

본 논문은 최근에 영국 보수당이 지역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한 큰 사회론을 신노동당의 제3의 길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의 초점은 두 이념의 공동체 형성의 전략에서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큰 사회론과 제3의 길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상이한 이념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방하는 이념인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블레어주의와 대처주의의 합성인 블레처리즘(Blatcherism)의 영역에 속해 있다. 즉 두 이념은 시장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상품화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두 이념의 차이가 있다면 제3의 길이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재상품화의 정책을 추구한다면, 큰 사회론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해 시장자유주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은 삼쌍둥이처럼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은 같지만 전술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두 전략은 탈상품화가 아닌 상품화와 재상품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계급이 아닌 책임성과 독립성을 가진 개인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주요어: 제3의 길, 큰 사회론, 사회투자국가, 탈상품화, 지역공동체

## 1. 삼쌍둥이의 좌표

이념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참조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영국은 19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 20세기 중반 전후까지의 사회민주주의 정치, 1980~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제3의 길과 현 정권의 큰 사회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념이 정책의 지도라고 본다면, 영국은 상이한 정책들이 교차했다. 즉 영국은 상이한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이들이 제안한 이념과 그에 상응하는 정책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영국은 다양한 정책과 이념의 결합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갖춘 호화로운 전시장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국의 좌우파가 상대방으로부터 정책을 베끼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렴현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버츠크리즘(Butskellism)과 블레처리즘(Blatcherism)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당과 노동당의 수렴현상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최근에 영국에서 제시된 보수당의 큰 사회론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기존 논의를 이해해야 한다. 기존의 이념과 정책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자유를 통한 경제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왔다. 즉 두 입장은 국가 중심 또는 시장 중심, 시장 실패 또는 국가 실패의 비판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그런데 큰 사회론은 그 명칭에서 보듯이 국가와 시장이 아닌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nservative Party, 2010a; Cameron, 2008; Cabinet Office, 2012). 이것은 외형상 기존의 이념적 틀을 벗어난 창조물인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새로운 제4의 길의 탄생인가? 이것은 블레처리즘과 버츠크리즘과 비교하여 어느 쪽에도 수렴되지 않고 있는가? 하지만 제3의 길은 독자적인 길이 아니라 대처리즘에 가까워서 블레처리즘으로 묶인 데서 보듯이 큰 사회론도 어딘가에 수렴되고 있지 않은가?

본 논문은 최근에 영국의 정치가 대안으로 제출한 노동당의 제3의 길과 보수당의 큰 사회론의 정치적·이념적 위상을 밝히고, 각 입장에서 제

시하고 있는 공동체 구상을 국가의 역할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보수당의 큰 사회론을 제3의 길과 대비시켜 소개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 논문의 기본 관점은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뚜렷이 구별되는 이념적 내용과 정책을 가지기보다는 삼쌍둥이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양자는 동일한 내용을 가진 몸뚱이에다가 담론이나 강조점이 다소 다른 수준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글은 큰 사회론이 블레처리즘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제3의 길보다 대치주의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고 본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조직화를 이해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으로 호명된 삼쌍둥이가 어떤 이념적 배경을 기반하고 있고, 어떻게 자신을 차별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과연 그런 차별화는 성공했는지, 그 차별화가 공동체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도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영국이 대안으로 선택한 길이 상품화 또는 탈상품화의 정치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 절에선 우선 논의의 전제로서 이론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즉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을 검토하기 위해 정치의 두 가지 유형을 상품화의 정치와 탈상품화의 정치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영국의 이념 수렴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의 좌표를 설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어지는 각각의 절에서 제3의 길, 큰 사회론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비교평가하고 이 대안들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두 개의 복지정치와 전략: 상품화와 탈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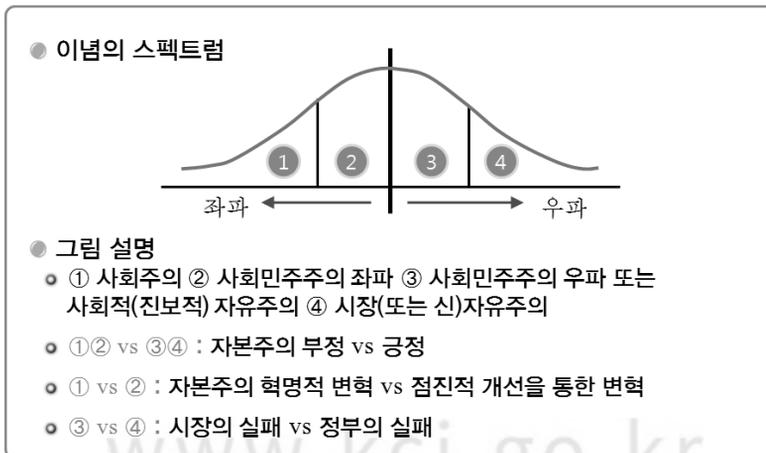
이념은 정치의 지도이다. 따라서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지도를 이해해야 한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념의 지형학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자본주의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본주의 인정쪽(3, 4)과 불인정(1, 2)으로 나뉜다. 인정쪽에서는 시장을 진보의 동력으로 보는 쪽(4)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국가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3)으로 나뉜다. 불인정 쪽에는 자본주의 변혁 방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데, 급진적 혁명을 주장하는 1번의 길과 점진적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극복을 주장하는 2번의 길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념을 이야기할 때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한다. 이것을 <그림 1>의 위치에 각 입장에 이름을 붙이면, 4번은 시장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1번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2번과 3번에 위치한다. 본 글에서는 2번은 사회민주주의 좌파, 3번은 사회민주주의 우파라고 잠정적으로 분류하자.

앞서 언급했듯이 각 입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자본주의는 만물을 상품화한다(Wallerstein, 1995). 상품은 시장에 나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적

<그림 1> 이념의 지형



자생존, 승자독식, 양육강식의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이윤이 자본주의를 떠받치면서 상품은 만물의 척도가 되고 결국엔 물신(fetishism)이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물신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인격까지도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낯것 그대로의 자본주의는 사회를 쇼핑몰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Patel, 2009). 쇼핑몰 속에는 상품(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다. 이 속에서 인간은 이윤과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동물로 묘사된다. 즉 쇼핑몰은 경쟁과 우열을 당연시한다. ‘1원1표의 원칙’이 관철되는 쇼핑몰 속의 인간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더 완전한 자립정신과 자조정신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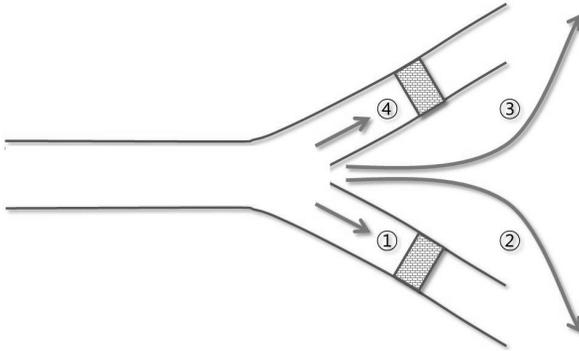
이런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정한 룰은 기회의 평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보장이다. 한마디로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역할이다(Hayek, 2006; Friedman, 2007). 그렇다면, 이 논리에서 부자가 되지 못한 인간은 무엇인가. 근면하지 못한 인간, 자립정신이 박약한 인간, 자조적이지 못한 인간이다. 따라서 빈곤층과 불평등은 일종의 적응하려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고 형벌이다. 이 형벌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는 사랑의 채찍(매)인 것이다. 시장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논리로 무장하고 있다. 모든 것은 상품화가 되어야 한다. 그 사회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자유로운 인간을 뛰어넘게 한다.

그렇다면, 쇼핑몰 속의 철칙(상품화, 시장의 경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권력 부여)과 사랑의 매는 과연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가. 비판론자들은 자본주의가 시장자유주의의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의 계급으로 이끌고 이들 간의 대립과 억압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총체적 인간(정치적 동물)이어야 할 인간은 권력을 자본가에게 넘기고 소비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된다. 또한 자본주의는 독점과 계급불평등으로 귀결된다고 본다(Chomsky, 1999).

따라서 비판론자들은 시장자유주의에 의해 작동하는 자본주의의에 대한 새로운 정치를 상상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립하여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를 지향한다(Esping-Andersen, 2007). 얼마만큼, 어떤 제도를 통해 이것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정치의 상상력은 달라진다. 기본적인 관점은 경제적 인간에 대응하는 정치적 인간이고, 기회의 평등과 시장의 자유에 대응하는 조건의 평등과 자유의 조건의 형성에 관심을 갖는 공동체이다. 탈상품화의 정치는 자본주의의 개혁일 수도 있고, 전복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다른 길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대체적인 합의는 시장 자유주의가 아닌 어떤 길 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정치는 자본주의의 상품화에 대응하여 탈상품화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플라니가 상품화하지 말았어야 할 항목을 들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면, 마르크스는 적대적 계급에 기반하여 벌어지는 상품물신주의의 토대 자체를 없애는 혁명을 꿈꾸었다(Polanyi, 2009).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탈상품화의 목록을 정치시장을 통해 작성하고 이 꿈을 실현함으로써 인간과 자본주의를 구하고자 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문명적인 길은 복지국가로 귀결되었다. 탈상품화의 목록에는 의료, 교육, 빈곤, 주거 등과 아동,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노동력이 등재되었다. 사회권과 사회적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득과 서비스 등의 현금과 현물이 탈상품화의 정치를 통해 형성되고 전달되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정치는 상품화와 탈상품화를 둘러싼 대립과 타협으로 구성되었다(Berman, 2010; Wahl, 2012).

이상의 논의를 <그림 2>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2>에는 네 개의 길이 있다. 4번 길은 시장자유주의의 길이다.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이 주창하는 길이다(Hayek, 2006; Friedman, 2007). 4번 길을 가다보면 건널목을 만난다. 그 건널목은 불평등, 빈곤, 독점 등이다. 이들은 이 건널목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불평등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채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치(징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들이 보기에 이 형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오히려 파시스트적인 정치적·경제적 독

<그림 2> 네 개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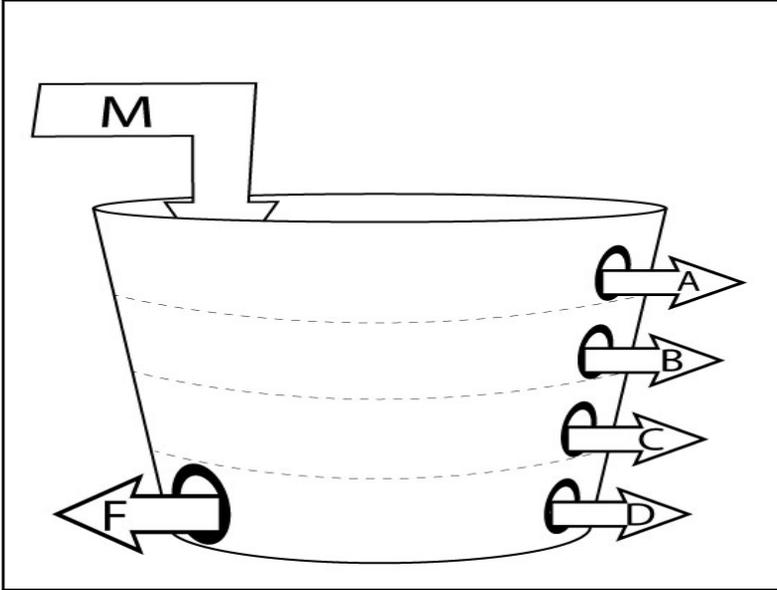


점으로 넘쳐나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배불리 먹어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 될 것이다.

1번 길(사회주의)은 4번 길의 비인간화와 소외, 상품물신주의, 자본가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선택된 길이다. 1번 길을 가다보면 역시 건널목(장애물)을 만난다. 그 건널목은 폭력을 수반한 혁명이다. 계급소멸을 위한 전쟁의 건널목이다. 이들은 이 건널목(눈물의 계곡)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건널목을 건너야지만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계급착취의 저항을 제거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것을 통하면 인간은 모든 상품화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의 발전이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진정한 자유인이 존재하는 대지에 살게 될 것이다.

2번(사회민주주의 좌파)과 3번의 길(사회민주주의 우파)은 1번과 4번에 있는 두 건널목을 우회하여 좀 더 나은 인간세계를 구성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길이다. 3번은 탈상품화의 정치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도달하려고 한다. 한편 2번 길은 탈상품화의 정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상품과 계급이 철폐된 사회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림 3> 탈상품화의 복지정치



탈상품화를 추구하는 2, 3번의 정치는 주로 서유럽의 복지국가를 형성하였다. 이 두 길이 추구한 탈상품화의 정치 또는 복지정치는 <그림 3>을 통해서 잘 이해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정치는 재원(M)을 얼마만큼 누구에게서 가져 올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라고 할 수 있다. 탈상품화의 정치(복지정치)가 기본적으로 소득이전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재원은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른 기여로 만들어진다. 이는 주로 직접세 방식을 취하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자세 등이다. 만약 재원(M)의 투입이 줄어든다면 통에 물이 조금 찰 것이고 따라서 D 수로로 밖에 재원을 흘려보내지 못할 것이다. 반면 재원(M)이 많이 투입된다면 A라는 통로로까지도 물(재원)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탈상품화의 정치는 A, B, C, D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기도 하다. D의 경우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의미한다. 잔여

주의 또는 선별주의로 일컬어진다. 그렇다면 A, B, C는 무엇인가. 의료, 교육, 보육 또는 보편적인 급여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일 수 있다. 어떤 것이 C가 되는가, B가 되는가, A가 되는가를 둘러싸고 탈상품화의 정치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다. 다시 말해 사회보험에 초점을 두어 탈상품화에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지만 계층화는 유지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유형이 될 수도 있고,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완화에 성공한 보편적 복지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이 될 수도 있다(Esping-Andersen, 2007).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F이다. F는 재원(M)을 탈상품화의 정책에 쓰기보다 다른 쪽으로 흘러 보내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인 물을 노동 시장의 형성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일로 흘려보내는 통로인데, 이럴 경우 A, B, C 또는 D로의 분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탈상품화의 정치 위기는 M이 줄어들 경우와 F로 돈이 전용될 경우, 또는 A, B, C, D의 파이프가 더욱 커질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M이 줄어들 경우는 부자감세가 대표적이고, F로 인해 복지재원이 줄어들 경우는 재개발과 토건 등의 경제적 개발에 많은 돈을 쓴 결과 복지재원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A, B, C, D가 늘어난다는 것은 빈곤층이 확대되거나 노인층이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그림 3>은 어떤 것이 복지국가 위기의 보다 결정적인 원인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상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만물을 상품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시장-경쟁-성장은 필수품으로 거론되고, 성장숭배(Growth Fetishism)라는 물신에 인간이 소외될 수 있다(Hamilton, 2011). 따라서 이에 대한 탈상품화의 경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탈상품화의 정치를 통해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 조건의 평등이 실현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의 정치는 상품화와 탈상품화라는 두 경향의 정치가 맞부딪친다. 영국의 정치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복지국가의 정치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네 개의 길 중 어느 쪽에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다음절에

서 영국의 이념과 정치의 수렴현상을 논의할 것이다.

### 3. 삼쌍둥이의 탄생: 버츠크리즘과 블레처리즘

영국은 양당제를 유지해 왔다. 토리와 휘그 즉 보수당과 자유당이던 양대 정당은 1900년 노동당 창당 이후 점차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체제로 변모했다. 노동당이 노동자주의(labourism)와 영국식 사회주의에 기반했다면, 보수당은 온정적 보수주의와 시장자유주의(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sup>1)</sup> 전자는 다시 좌우파로 나뉘어 복지국가와 제3의 길로 구체화되었다면, 후자 역시 좌우파로 나뉘어 복지국가를 계승하거나 대치주의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두 개의 기둥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를 구성했다. 이 두 기둥은 국가와 시장 등에 대한 관점을 둘러싸고 각각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하여 왔다. 이처럼 두 기둥은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역사는 둘의 기묘한 결합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버츠크리즘과 블레처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버츠크리즘은 전후 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다. 양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은 국가의 개입에 대해 노사 모두 강력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전쟁 중의 경험은 노동당 집권을 통해 전후 합의(post-war settlement)로 발전한다. 따라서 버츠크리즘(Butskellism)은 전후 합의 또는 합의의 정치(politics

---

1) 비치(Beech, 2009)는 보수당의 이데올로기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일국보수주의, 신우파, 자유적 보수주의(One Nation, New Right/Thatcherite, liberal conservatism). 한편 노만(Norman, 2010: 87)은 보수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수렴된다고 보고 있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Liberal or Libertarian Conservatism), 온정주의적 보수주의(paternalist conservatism). 노만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liberal과 libertarian으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각각 비치의 liberal과 New right/Thatcherite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적 보수주의는 사적 소유, 자유시장, 경쟁, 지방주의(localism)과 연관된다면, 온정적 보수주의는 공동체와 사회적 안정에 주목한다.

of consensus)’의 다른 이름이다. 이 단어는 1954년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명명됨으로써 생겨났다. 애틀리 정부의 마지막 재무상인 게이츠켈(Hugh Gaitskell)과 그 뒤를 이은 처칠 정부의 첫 재무상 버틀러(Butler)의 합성어인데 두 사람의 예산안이 유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Wikipedia, 2012.3.5 검색).

버즈켈리즘에서 보듯이 1945~1979년의 복지국가 시기에 노동당과 보수당의 정책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차이는 정도의 문제일 뿐이었다. 애틀리 정부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제공되었고, 국가보조는 특정 개인이나 가정이 보편적 수혜를 통해서도 빈곤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비용이 증대되고 경기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후기의 노동당 정부는 보편적 수혜를 제고했다. 실업과 질병에 대한 1966년의 지원과 연금에 대한 1975년의 지원은 소득과 연계된 추가적인 지출(1975년의 프로그램을 SERP라고 부른다)을 요구하였다. 자격을 취득할 만한 충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재신증명을 한 후에 보편적 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한편, 보수당 정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 노동당보다 더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그러나 주요한 보편적 수혜 프로그램의 틀은 지속되었다(Freedman, 2002: 285).

버즈켈리즘을 파기한 것은 대처였다. 1979년 불만의 겨울을 이용하여 집권한 대처는 전후 합의의 탈상품화 정치가 영국인들로 하여금 존엄과 자립, 자조정신을 잃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집권기간 동안 자신의 생각이 사람들의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에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즉 보수당 정부는 민영화, 탈규제, 자유화 등을 통해 시장제도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대처의 대중 자본주의의 주주 민주주의를 지지했다(Lee, 2009: 5).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권력은 위축되었다.

한편, 18년간의 불임정당 기간 동안 노동당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어는 1994년 당수가 된 이후 당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의 노동당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노동계급을 위한 당이었고 노동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반면

블레어의 이른바 신노동당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하고 사회주의 강령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다. 블레어는 구좌파와 신우파의 사이길인 ‘제3의 길’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수당 대처수상의 영향력하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카메론은 보수당이 총선에서 블레어에게 네 번을 패했지만 이념의 전쟁에서는 이겼다고 평가했다(Lee, 2009: 5).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은 이를 잘 나타낸다. “집권 후 1년 동안 행한 일들을 돌이켜 보건대 영국의 새로운 노동당 정부는 이 나라를 대처리즘에서 더욱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면서 신노동당은 마치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는” 것 같다(김상수, 2008: 117). 이처럼 대처와 블레어 간에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레드 페퍼(Red Pepper)의 사실에서 블레처리즘(Blatcherism)으로 명명하였다(Wikipedia, 2012. 3.5 검색). 이것은 신자유주의 합의(new liberal consensus)를 의미한다.

한편, 현 보수당의 당수 카멜론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근대화된 온정적 보수주의(modern compassionate Conservatism)’(Cameron, 2006) 또는 진보적 보수주의(progressive conservatism)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처주의의 지류이며 블레어주의와 흡사하다. 즉 큰 사회론은 노동당의 제3의 길과 깊게 내통하고 있고 양자는 대처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입장은 이후 절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이 삼쌍둥이처럼 몸이 붙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관심의 영역과 정책의 영역에서 자기 개성을 드러낼 뿐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보듯이 영국의 정치는 좌우파 간의 차이를 좁히는 수렴현상이 발생했다. 정치학자 리처드 로스(Richard Ross)는 “정당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후에 “그렇다, 그러나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스스로 대답하였다. 정당들은 종종 장기간에 걸쳐 숙고해온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새로 집권하게 된 정당은 그것들을 수정하지만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로스에 따르면, 기존의 정책에 대하여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면 그것은 변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그것은 움직이는 합의(moving consensus)라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양당 간에 광범위

한 합의의 영역이 존재함을 암시한다(Freedman, 2002).

#### 4. 사회투자국가, 신자유주의의 길을 내다

토니 블레어는 자신을 좌파보다는 ‘급진 중도파’(radical centre)로 불리기를 원했다. 그는 이 비전에 기반해서 노동당뿐만 아니라 대처와 근본적으로 결별하는 새로운 영국(New Britain)을 만들기를 원했고 대처리즘의 프로젝트를 모방해서 ‘블레어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선언했다(Jacques, 1999; Hall, 1999: 53). 블레어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낡은 이념이 아니라 세부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실용적인’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Hamilton, 2011: 193). 그런데 본 글은 블레어주의가 명확한 자신의 ‘기본틀’(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때 개별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Jacques, 1999: 14~15). 따라서 본 글은 블레어주의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이 기반하고 있는 제3의 길의 철학과 정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의 길은 두 개의 길(제1의 길과 제2의 길<sup>2)</sup>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제1의 길은 구좌파에 의한 구식 사회민주주의이다. 이것은 제3의 길론자들이 보기에 “어디서나 단선적 근대화 모형, 즉 ‘사회주의의 길(the path of socialism)’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했다(Giddens, 1998: 42). 따라서 이들이 보기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의 서구판이다. 이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본주의와 시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즉 “늘 자본주의가 쇠신하고 적용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시장이 “제공하는 정보장치로서 갖는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Giddens, 1998: 36).

이 언급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회민주주의가 보이지 않는

2) 여기에서 제1의 길은 본 글 <그림 2>의 3번 길이고, 제2의 길은 4번 길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의 길은 <그림 2>에서 4번과 3번의 사잇길을 의미한다.

손을 가진 시장의 작동 대신 국가개입을 과도하게 옹호했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즉 궁극적으로 국가개입을 통해 탈상품화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복지국가의 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기든스는 이 구식 사회민주주의가 의도했던 평등은 오히려 사람들을 질곡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구좌파의 평등주의는 그 의도는 고귀했지만 우파 비평가들이 말하듯 가끔 왜곡된 결과로 이어졌다. 그것은 예를 들어 사회 공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사회 공학에 의해 주택 단지를 건설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쇠퇴해 가는 우범 지대로 변모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이라고 본 복지국가는 오늘날 그것이 해결하는 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Giddens, 1998: 50)

이처럼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한 조건의 평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심했다. 제3의 길은 구식 사회민주주의가 계급 간 불평등을 국가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사이에 복지수혜자를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3의 길은 제2의 길인 신자유주의<sup>3)</sup>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비판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경쟁을 예찬하고 평등주의를 반대한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능력에 따른 노력과 분배의 결과물이므로 당연시해야 한다(Hayek, 2006: 159~160; 78~79). 이런 맥락에서 복지와 복지국가를 공공연하게 비판해왔다(George and Wilding, 1994):

3) 기든스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제2의 길에는 신우파(보수주의)와 자유시장주의의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신자유주의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 중심 갈래는 보수주의적이다. 이것이 ‘신우파(the new right)’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많은 보수주의 정당들의 견해가 되었다. 이와 달리 자유시장 철학과 연관된 중요한 사고의 형태가 아울러 존재하는데, 이는 보수주의적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쟁점에서 자유시장주의적이다.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대처리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예를 들어 성의 자유 또는 마약에 대한 처벌 면제에 찬성한다(Giddens, 1998: 37).

복지국가는 그것의 예정된 수혜자, 즉 취약하고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파멸적인 해악을 끼친다. 남성과 여성 개인의 진취적 자립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 자유 사회의 기초 그 바로 밑에 터질 위험이 가득한 폭발물을 장치해 놓는다(Giddens, 1998: 46~47).

따라서 복지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국가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쟁을 위한 계획(planning for competition) 또는 공정한 규칙 제정과 법 집행일 때이다(Hayek, 2006: 85, 128).

이 같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을 분석한 뒤에 제3의 길론은 신자유주의가 자기 모순 때문에 곤경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에는 신자유주의의 두 가지 요소인 시장근본주의와 보수주의의 긴장관계가 있다. 전통을 지속하려는 보수주의와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하려는 시장세력은 충돌한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자유시장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가족과 민족에 헌신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가족, 또는 민족 정체성에서 벗어나려는 경계선에 이르면 그 순간 갑자기 개인주의는 기능을 멈추고 선택의 여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시장 세력의 ‘영구 혁명(permanent revolution)’만큼 전통을 해체시키는 것도 없다. 시장사회의 역동성은 전통적 권위구조를 훼손하고 국지적 공동체를 파괴한다”(Giddens, 1998: 49). 이처럼 기든스는 신자유주의가 자신의 존재기반인 사회적 기반, 즉 공동체적 형태 자체를 파괴한다고 보았다(Giddens, 1998: 49).

이상에서 보듯이 제1의 길은 자신의 강점인 평등에서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개인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고, 제2의 길은 시장물신주의로 인해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져서 자신의 존재기반이 붕괴하고 있는 중이다. 양자 모두 공동체를 위협한 것이다. 제3의 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사잇길을 모색한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기든스는 “내가 사용하는 ‘제3의 길’은 지난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근본적으로

로 변한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응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 형성의 틀”이라고 주장한다(Giddens, 1998: 62). 이 언급에 따르면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의 내부로부터 이를 쇄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기든스의 희망대로라면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sup>4)</sup> 과연 그럴까.

이상에서 보듯이 제3의 길은 구식 민주주의가 잃어버린 개인과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공동체를 구하려는 프로젝트이다. 제3의 길의 개인은 세계화 영향으로 탄생한 ‘새로운 개인주의(new individualism)’를 통해 재규정된다. 즉 이것은 “대처리즘이 아니고, 시장 개인주의도 아니며, 원자화도 아니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제도화된 개인주의(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이다. 제도화된 개인주의는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계획하고,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인데(Giddens, 1998: 77), 제3의 길은 이것이 구식 사회민주주의에서 매우 취약했다고 보고 있다. 즉 “책임 또는 상호 의무라는 주제는 구식 사회민주주의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이 집단 공급이라는 개념 속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체로 휴면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기든스는 “개인과 집단적 책임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Giddens, 1998: 78).

이러한 관점은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가 계급을 강조하는 것과 매우 다른 태도이다. 즉 제3의 길은 “시민들이 그들의 자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그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적 이니셔티브를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Taylor, 2008: 175). 그 결과 “국가가 호의를 베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시민들보다는 생생한 시민사회에서 일하는 역동적인 개인들”이 되는 것이다(Taylor, 2008: 181). 이처럼 제3의 길은 제1의

4) 제3의 길의 주창자들은 사실은 제3의 길이 새로운 상황의 새로운 길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 기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당은 새로운 정책 전망, 정책내용이 풍부한 전망, 즉 제3의 길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 정책의 혁신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책혁신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좌파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 업무의 대부분은 대처 집권의 찌꺼기를 제거하고 이 나라를 새 시대에 맞게 준비시키는 것이었다(Giddens, 2007: 24).

길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개인이 사라진 자리에 역량과 책임성을 가진 제도화된 개인을 불러내고자 한다. 따라서 ‘제3의 길 정치’의 전반적인 목표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혁명들 즉, ‘세계화’, ‘개인 생활에서의 변화’,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길을 개척하도록 돕는 데 있다(Giddens, 1998: 110, 112).

한편 제3의 길은 제2의 길의 문제점이 공동체의 파괴에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쇄신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의 동반자 관계, 지방 주도를 통한 공동체 쇄신, 제3 부문의 관여, 지방 공공 영역의 보호, 공동체에 기반한 범죄 예방, 민주적 가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Giddens, 1998: 132). 이 주장에 따르면, 가족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가족은 정서적·성적 평등, 관계에 있어서 상호 권리와 책임, 공동 양육, 평생 양육 계약, 아이들에 대한 타협적 권위,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책무, 사회적으로 통합된 가족을 의미한다(Giddens, 1998: 151). 그리고 시민사회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기든스는 평등의 진정한 의미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사회적 포용과 인간 잠재력의 배양에 기여해야 함을 이해하는데 달려 있다고 믿는다. 포용적 사회는 모든 시민이 공공 영역에 관여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고, 사람들이 교육과 노동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 사회이다(Taylor, 2008: 176~177). 이상에서 보듯이 제3의 길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조화를 위해 고민한다. 그 해법은 “개인들이 자신들의 행동과 생활양식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우리가 ‘개인의 책임과 집합적 책임 간의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에 있다(Taylor, 2008: 180). 이처럼 제3의 길에 상정하는 이상적인 시민은 교육수준이 높고, 유연하며,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이동성이 높은 노동자다(Hamilton, 2011: 203~204).

이상의 능동적, 역동적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 조건의 평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에 기회의 평등에 기반해서 정책이 수립된다. 블레어에 따르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복지제공과 공

적 서비스에서의 침해된 균일성'이 아니고 사회 전체에 만연한 진정한 기회의 확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들의 역량 강화에 확고한 강조점을 둔다. 제3의 길은 기회의 평등이 더 많은 다양성과 결과의 불평등을 허용한다고 본다. 즉 기회의 평등은 능력주의 사회를 허용하고, 획일성을 비판하고, 진보를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장벽의 파괴와 동일시한다. 이런 이유로 기회의 평등은 사회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와 더 쉽게 연결된다(Taylor, 2008: 178). 이상에서 보듯이 제3의 길은 계급이 아니라 개인에 집중한다. 그런데 이 개인은 더 이상 조건의 평등을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능력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하고 시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국가는 능동적인 개인의 활성화와 이들이 주도하는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즉 제3의 길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Taylor, 2008: 178~179).

제3의 길 지지자들은 국가 의존 정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수정된 형태의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제3의 길은 국가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지만 그 역할은 '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런 국가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은 소위 권한 부여적 국가와 사회투자국가 개념에서 응집적으로 표현된다. 권한 부여적 국가는 다양한 집단들이 그들 특유의 사회선에 공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강화하고자 한다. 하지만 권한부여적 국가는 국가단독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시민활동을 주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Taylor, 2008: 179).

제3의 길은 “‘정부를 적이라 말하는’ 우파와 ‘정부가 해답이라고 말하는’ 좌파를 넘어서서 국가를 다시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Giddens, 1998: 121). 이상에서 보듯이 제3의 길은 의사결정을 지방분권화하고 국가를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재건설하고자 한다(Taylor, 2008: 180). 이처럼 블레어에게 있어 국가는 사회의 행위자들 중의 하나이다. 국가는 민간부문과 그리고 자발적 부문과 연계하여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가는 지역사회와 자발적 부문조직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적 국가로 이용될 수 있다(Taylor, 2008: 180).

한편,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경제적 부양비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되도록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투자”하는 국가이다. 즉 국가는 “개인들의 선택을 지원하고 교육과 훈련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에게 개방된 기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개인 발전을 촉진”한다(Taylor, 2008: 175).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나은 노동력 상품 개발을 위한 교육이다. 토니 블레어는 정부의 세 가지 주요 역점 사업을 ‘교육, 교육, 교육’이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늘날 정부의 필수 사업이고, ‘가능성의 재분배’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Giddens, 1998: 169). 하지만 이 교육과 훈련은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재교육시킨다”는 의도를 갖고 구상되었다(Hall, 1999: 64).

이상에서 보듯이 기든스는 복지국가와 그 제도가 사람에게 투자하고 모험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두어야한다고 믿었다. 복지제도는 ‘사회투자 국가’의 부분으로서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잠재력을 배양할 수 있고, 건설적인 모험을 장려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Taylor, 2008: 181).

이처럼 사회투자국가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는 국가이다. 즉 근로연계복지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량 형성 전략(capacity-building), 고용을 통한 자활 등을 자기전략으로 하는 국가이며 그 결과 적극적인 기회의 재분배와 근로의무를 사회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국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국가는 여성과 노령 인구 그리고 실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예를 들어 사회투자국가는 노동인구를 재상품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상에서 보듯이 권한부여적 국가와 사회투자국가는 ‘복지국가’를 ‘복사사회’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제3부문 기관들이 두드러진 활동을 못 하는 곳에서는 그것들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혜택의 하향식 배분은 좀 더 지방적인 차원에서 분배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복지 제공의 개선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한다(Giddens, 1998: 178). 그리고 제3의 길은 이런 사회투자를 위한 비용도 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복지사회는 단지 국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와 아래로까지 확장된다(Giddens, 1998: 189).

기든스가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블레어가 실천한 제3의 길은 이후에도 노동당의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브라운의 신노동당은 균형재정 원칙하에서 추구되던 지출억제에서 지출확대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공공지출의 사회투자적 측면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고용촉진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기반을 둔 활성화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브라운 정부와 현재의 밀리밴드 체제도 여전히 제3의 길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은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sup>6)</sup>이지만,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sup>7)</sup> 그

5) 우리는 고정된 정년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노령인구를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연금 생활자라는 범주는 연금 자체로부터 분리되어 사라질 것이다. 연금 기금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것에 고정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Giddens, 1998: 181). 노령이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시기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버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유명하다. “사회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그리고 태어날 사람들 사이의 동반자 관계이다.”(Giddens, 1998: 182)

6) 오늘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시장친화적이어야 하며, 또 자본주의가 생활수준

런데 그 통제가 시장을 활성화하는, 다시 말해 시장에서 탈락된 개인들을 재상품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시장과 맞서기 보다는 시장에 순응하는 비관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시장화와 세계화를 멈출 수 없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신자유주의를 묵묵히 받아들였기 때문이다(Jacques, 1999; Hall, 1999). 즉 제3의 길은 탈상품화의 정치를 시도하기 보다 재상품화의 정치를 구사했다. 이런 점에서 조건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을 선호한다. 캐머론은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는 경제위기와 ‘우리-그들’이라는 정신적 경향(‘us v them’ mentality), 두 개의 상호 연관된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 양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심화시켰다. ... 영국병과 이 원인을 해결한 이가 대처수상이었다. ... 토니 블레어는 새로운 노동당의 임무가 개방된 시장경제와 ‘우리 vs 그들’의 정신적 경향 철폐라는 대처혁명의 과실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Cameron, 2006).

이처럼 제3의 길은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대처가 이루지 못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교하게 진전시켰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해 그 속에 하이예크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내장되어 있고 신노동당의 연설과 통치관행에는 신자유주의 사상 흔적이 발견된다(Dixon, 2003:

---

을 높이는 일에서 그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비해서도 월등히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경제제도로써 공산주의는 실패하였다. 시장은 가격 결정 기능을 아주 쉽게, 그것도 하루에도 수없이 여러 번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가격 결정을 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여 가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중도좌파는 시장의 범위를 좁히기보다 넓히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할지 모른다. 예를 들어 유럽 단일시장이 완성되면 영국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Giddens, 2007: 26~27).

- 7)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자본주의를 대신할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남은 논쟁은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통제하고 규제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Giddens, 1998: 85~86)

152). 이렇게 본다면, 제3의 길은 새로운 자신의 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아가는 길을 만든 것이다. 즉 제3의 길은 “계급 구분이나 우파 좌파의 양분법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 분포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계급의 눈으로 볼 것을 거부한다(Giddens, 1998: 56). 더 나아가 시장에 적응하는 사람들을 길러냄으로써 시장을 엄호하는 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를 만들었다.

이상에서 볼 때 제3의 길의 지역공동체는 계급이 아닌 개인들과 민주적 가족이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역량 있는 주체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행위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역은 제3섹터로 불리는 중간지대나 시민사회이다. 이제 국가는 정치의 영역이기 보다는 인적 투자를 지휘하는 경제적 주체가 된다.

## 5. 큰 사회로 시장을 엄호하라

제3의 길에 밀려 1997년 이래 12년 동안 ‘불임정당’이었던 보수당은 2010년 5월 6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구성되었다(Laws, 2010: 7).<sup>8)</sup> 연립정부 내각의 수반은 캐머론으로서 그는 겨우 39세에 보수당의 당수가 되고 45세에 정부수반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기존의 이념들과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큰 사회론은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큰 사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캐머론이 서 있는 이념적 전통과 기반을 알아야 한다. 캐머론은 자신이 진보적 자유주의자 또는 현대화된 온정적 보수주의자로 위치지어지고 싶어 했다(Cameron, 2006). 이를 위해 개발된 정치적

8) 선거결과는 최종적으로 보수당 306석, 노동당 258석, 자민당 57석, 기타 28석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당도 전체 의석(650)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형 의회(Hung Parliament)가 불가피했다.

담론이자 이념이 ‘큰 사회론’이다.

캐머론은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와 구식 사회민주주의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큰 사회론의 극복대상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의 상징인 제3의 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머론은 제3의 길 죽이기를 시도한다. 그렇다면 큰 사회론은 제3의 길의 무엇을 혐오하였고 넘어서려고 하는가. 그것은 제3의 길에 큰 국가를 기반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큰 국가(주로 복지국가)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것이 캐머론의 신념이다.

캐머론은 노동당의 큰 국가가 상명하복식의 관료제(top-down bureaucracy)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캐머론은 노동당의 당수 브라운이 국가만이 공정함(fairness)을 보증한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유일한 공적 서비스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했다(Cameron, 2006). 이것은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밀어내고 사회적 책임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사회와 공동체가 취약하게 되었다. 캐머론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 즉 노동당 13년 동안 불신(2/5가 지방정부의 이익을 위한다고 믿음), 개인의 고립(공동체의 97%가 파편화됨), 정치의 무관심(인구의 3%만이 시민 사회에 참여)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3섹터에 할당된 너무 많은 돈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했다(Conservative Party, 2010a).

이처럼 캐머론은 재정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파손된 영국(financially, societally, politically broken Britain)을 수선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대한 더 좋고 싼 대안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이타주의와 관대함, 그리고 정치적으로 더 책임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큰 권력과 정보를 줌으로써 큰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Evans, 2011: 165). 이것은 큰 사회정책의 세 가지 핵심내용으로 정리되었다. 공동체에게 권한을 부여한다(empowering communities),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한다(opening up public services), 사회행동을 증진한다(promoting social action)(Cabinet Office, 2010: 3; HM Government, 2011: 5, 13).

2009년 11월 휴고 영(Hugo Young) 강의에서 제시된 캐머론의 큰 사회론은 제3의 길에 비견될 만큼 발상의 전환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아니면 시장 또는 국가실패 아니면 시장실패라는 기존의 논의에 대해 둘 다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캐머론은 더 작은 국가도 사회적 원자화(social atomisation)에 대한 자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큰 국가에서 큰 사회로 권력과 책임과 정책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Evans, 2011: 164; Norman, 2010: 1). 따라서 큰 사회론은 국가도 시장도 아니 사회에 집중한다:

큰 사회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생각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임파워먼트, 자유, 책임성 등으로 불릴 수 있다. 큰 사회론은 거대한 문명의 전환(a huge culture change)이다. 일상과, 집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들은 관료, 지방정부, 중앙정부에게 그들의 대답을 찾기 보다는 그들 스스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것인데, 영국정부의 엘리트로부터 거리의 남녀로의 권력의 가장 크고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이 재분배이다. ... 정부의 역할은 큰 사회론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Cameron, 2009a).

큰 사회에게 권력을 넘기라는 것은 공동체에 더 많은 권력을 주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들이 사는 장소의 틀을 결정하도록 더 많은 능력을 주는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가 폐쇄위기에 있는 지역의 시설과 서비스를 구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인수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조직가의 새로운 세대를 훈련하고 전국의 근린 그룹을 지지한다(Cabinet Office, 2012).

이상의 신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수당은 세 범주에서 6가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sup>9)</sup> 이것은 카메론의 표현에 의하면 ‘산산이 조각난 사회’를 구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첫 번째 범주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행동을 지지하고 심화시키는 일이다. 즉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자원단체들, 사회적 기업 등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데 실패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첫째, 큰 사회은행(BSB, Big Society Bank)을 창출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기본자금을 가질 수 있고, 업적모델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일하고, 공적 서비스 사용자가 이 기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큰 사회자립은행(An independent Big Society Bank)의 자금은 휴먼계좌(unclaimed assets from dormant bank)로부터 마련되고 이것은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근린단체, 비정부단체를 위한 사회적 투자시장의 창립자이다(a social investment market builder for charities, social enterprises, neighbourhood groups, non-governmental bodies). 현재 BSB는 공식적으로 Big Society Capital group(BSC)으로 명명되고 2011년 사회투자시장형성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Cabinet Office, 2011e; 2011c). BSC는 사회투자시장(social investment market)을 촉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 고안되었다. 즉 이것은 사회적 기업, 자선, 자원봉사와 공동체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 은행의 운영의 원칙은 독립성, 투명성, 자립성, 중개자(wholesaler) 등이다. 현재 이 은행은 4억 파운드를 은행의 휴먼계좌로부터 축적했고 부가적으로 2억 파운드를 네 개의 대형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을 계획이다(Cabinet Office, 2011d; 2011e; 2011c: 37~44).

둘째, 사회적 기업을 지지하고 배양하는 전략이다. 큰 사회은행은 독립적인 중간기관들(intermediary bodies)에 자금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목적을 수행한다(ex. The Esme Fairbairn Foundation, Acumen Capital, Young Foundation). 이 기관들은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과 공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 모델(payment-by-results and choice-based public service frameworks)에 재정지원 등의 보상을 받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보수당 정부는 협동조합, 사회

9) 이하 논의구도와 내용은 Conservative Party(2010a)를 참조하였다.

적 기업, 노동자 소유기업 등 제3섹터 시장을 육성하며,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제3섹터 시장에게 넘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공공영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소유기업을 창설하여 독립하면,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이들에게 위탁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역의 전철 및 마을버스 운영, 인터넷망 구축 사업,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사업, 학교운영 등도 지역주민과 민간에게 넘기겠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김홍수영, 2010: 54).

두 번째 범주는 근린단체(Niebourhood Groups)의 형성과 발전을 원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공동체가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보수당의 개혁 아젠다에 포함되어 있다. 즉 새로운 소규모 부대(little platoons)이자 큰 사회의 벽돌인 근린단체(neighbourhood groups)에게 새로운 권력과 권리를 부여한다. 또한 공공섹터의 개혁정책은 모든 성년이 활동적인 근린단체의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정부는 빈곤지역의 그린그룹의 창립과 발전을 위해,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s)의 훈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정책은 가장 빈곤하고, 불우하고, 파탄이 난 지역의 근린보조금(neighbourhood grant)을 제공하고, 전국공동체조직센터(National Centres for Community Organising)를 창립하는 것이었다. 이 조직은 지역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5,000명의 공동체 리더(community leaders)를 양성하고, 이들은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이끄는 지역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움직인다(Cabinet Office, 2010). 이것은 알린스키의 조직론으로부터 배워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 번째 범주는 큰 사회 창조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큰 사회론이 요구하는 문화는 책임성, 상호성, 의무감(responsibility, mutuality, obligation)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적 에너지와 사회행동의 헌신이 요구된다. 정부가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 사회조직, 미디어 등의 창조성과 자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권력을 지방정부에게 양도하고 우체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의 펍(local pubs)을 보호하고, 지역의 상가(local shops)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된 것으로서 전국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s' Service), 큰 사회의 날(Big Society Day) 등의 창립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유일한 정부의 서비스(the civil service)를 하나의 시민들의 서비스(a civic service)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지역공동체에서 근린단체의 형성에 관여하고 공동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무한다. 둘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적 행사로 큰 사회의 날(Big Society Day)을 지정한다(Conservative Party, 2010a; Cabinet Office, 2012).

이어서 캐머론은 큰 사회론 아젠다의 세 요소와 방법을 제시한다. 우선 세 가지 요소는 첫째 사회행동(social action)이다. 이것은 큰 사회론의 성공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결정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부는 중립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주의(voluntarism), 자선(philanthropy), 사회행동 등의 새로운 문화를 지지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는 공적 서비스의 개혁(public service reform)이다. 이 개혁의 방향은 돈을 소비하고 도덕을 침해하는 중앙화된 관료제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자선사업, 사회적 기업, 개인기업들과 같은 새로운 제공자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혁신과 다양성과 대중들의 필요에 대한 응답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공동체의 권한 부여(community empowerment)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그 자신의 운명을 지고 있는 이웃들과 열정적으로 공동체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큰 사회론 아젠다의 세 가지 방법은 첫째, 권력을 정치인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주는 것으로서 탈중앙화(decentralisation)이다(Cabinet Office, 2012).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nano' level, 커뮤니티, 이웃, 개인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엘리트관료로부터 거리의 일반남녀노소(from elites in Whitehall to the man and woman on the street)로 권력이 탈중앙화해야 한다(BBC News, 2010.7.19): '큰 사회' 프로젝트가 표방하는 핵심 모토는 화이트홀(영국 관청 밀집구역)로부터 지역사회로 권력을

대대적으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자민당 내각은 1) 시민 사회단체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하고, 2) 협동조합,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등 제3섹터 시장을 육성하며, 3)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방 행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4) 정부의 행정정보를 민간에게 공개한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이 청사진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셔턴, 버크셔, 에든버러, 리버풀 4개 도시를 정책 시범 실시지역인 이른바 ‘전위지역’(vanguard areas)으로 지정했다. 또한 2010년 7월 지역 공동체 운동 활동가들(community activists)과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초대해 큰 사회 네트워크(Big Society Network)라는 전국 시민단체 조직을 발족시켰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Teach First의 창시자인 넷 우에를 큰 정부 프로젝트의 공식 정책 조연자로 내정하고 그를 상원의회의 의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다(김홍수영, 2010: 51).

두 번째는 투명성(transparency)이다. 이것은 모든 정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민들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권리(‘right to data’)를 갖고 있고 언제든지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웃의 범죄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Cabinet Office, 2012). 그리고 세 번째는 재정의 지원(providing finance)이다. 즉 공공서비스 제공자(public service providers)에게 결과에 따라 공적 서비스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 더 작은 조직들은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자원봉사그룹 등을 위해 큰 사회은행(Big Society Bank)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이 캐머론이 제시하고 점차 구체화시키고 있는 큰 사회론의 대략적인 정체이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대처로의 복귀인가 제4의 길인가. 이를 위해서는 캐머론의 말을 경청해보자. 캐머론은 그동안 노동당과의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보면서 보수당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선전할 것을 주문한다. 이 내용은 대처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보다 이념의 중앙무대로 가서 투쟁하고 이곳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자 했다(Lee, 2009: 6~6).

이상에서 보듯이 케머론의 비전은 ‘사람을 신뢰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에 있다.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Cameron, 2006). 케머런에 의하면 “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임무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회와 같은 민간단체들도 지금은 주로 정부의 손에 있는 기능의 일부를 떠맡을 수 있으며, 시민들도 의무를 받아들여야 한다. 과거 대처 정부는 이 나라에 일종의 경제적 책임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지금의 과제는 사회적 책임감을 되살리는 것이다. 이 일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Giddens, 2008: 82~83).

하지만 케머론은 대처와 다른 점이 있다. 대처는 큰 국가를 깨는데 집중했다면 케머론은 큰 사회를 만들어 국가를 질식시키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국가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음의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진실은 큰 사회를 건설하는데 유용한 정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the truth is we need a government that helps to build a big society)(BBC news, 2010, 7.19). 이런 점에서 카메론은 국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케머런은 대처 전 수상과 그 후임자들의 철학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수주의 철학을 만들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노동당의 철학과 겹칠 가능성이 아주 컸다(Giddens, 2008: 79).

한편,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이 있다. 큰 사회론은 ‘not state but society’라고 말하면서 ‘not market’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시장을 옹호하기 위해 대처가 국가를 조각냈다면, 케머론은 사회를 강하게 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큰 사회는 작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미션은 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의 회복에 있었다(BBC News, 2011). 그렇다면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다음 절의 평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6.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가 향하는 곳

제3절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의 이념적·정치적인 전통적인 노선은 두 개의 좌파(노동당 내부의 좌와 우)와 두 개의 우파(온정적 보수주의자와 시장 자유주의자)이다. 이런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3의 길은 노동당 내부의 우파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한편, 큰 사회론 즉 진보적 보수주의는 현대화된 온정적 보수주의자로 명명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둘은 모두 대처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다는 점이다(Dixon, 2003: 141). 캐머론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당의 블레어에게 선거를 패배한 것은 선거이지 이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블레어 리즘이 보수주의 이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Cameron, 2006). 이처럼 두 이념은 블레처리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버츠헤리즘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보수당의 포섭이었다면 블레처리즘은 대처리즘에 대한 노동당의 포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이념은 앞서 보았던 <그림 1>의 4의 영역에 친화적이고 <그림 2>의 4번의 길로 나간다. 즉 이것은 두 이론이 탈상품화의 정치보다는 상품화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품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상품화를 통해 그리고 시민사회 속의 개인적인 책임감을 통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모순을 완화하려는 노선을 택했다. 따라서 <그림 3>에서 볼 때, A, B, C의 사회복지의 내용은 탈상품화와 의무와 책임을 지려는 노동자와 시민을 만들려는 투자를 위한 것이다.

두 정치가 묶이는 근거로 첫째, 모두 계급이 아니라 개인에 주목한다

10) 즉 “신노동당은 노동당안에서 권력을 빼앗은 소수 분파일 따름”이다(Marlière, 2003: 105). 기든스는 제3의 길의 사회민주주의 좌파에 대응되는 우파 노선이 있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으로 내가 처음 생각한 것은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이었는데, 이것은 제3의 길이라는 것과 내용상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만일 내가 처음 제목에 집착했다더라면 그 책이 그토록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제목으로 책이 나왔다면 아마 이 책은 학계 밖에서는 전혀 주의를 끌지 못하였을 것이다”(Giddens, 2007: 14).

는 점이다. 제3의 길은 계급의 존재와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제3의 길은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을 주체로 본다(Hamilton, 2011: 198, 200). 이 개인은 국가로부터 홀로 세계적인 기후의 위험요소들에 대항하는 고독한 개인의 이미지이다. 이런 점에서 블레어를 지지하는 세력은 전문직, 성직자, 관리직의 주택소유자 등의 ‘잉글랜드 중산층’과 기업가들이다(Hall, 1999: 69, 76~77). 이런 맥락에서 기회의 평등을 증진하고 사회정의는 자본주의 하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그들이 자유를 이용할 진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란 우리를 제 멋대로 두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다(Taylor, 2008: 178). 큰 사회론 역시 계급이 아닌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자발적인 개인들과 그들의 결사체에 주목한다.

둘째, 두 관점은 모두 불평등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양자는 조건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의 4번이 가다가 만나는 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을 두 관점은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려고 한다.

셋째, 두 사람의 국가의 기능에 대한 유사한 입장이다. “제3의 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복지국가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에, 20세기에 맞게 복지국가를 재설계할 것을 약속한다. 이 새로운 설계는 국가에게 여지를 보다 적게 허용하고, 새롭게 역량 강화된 개인에게 보다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Taylor, 2008: 184).<sup>11)</sup> 블레어의 사회투자국가론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이다. 즉 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는 국가를 선호한다. 이를 활성화전략이

11)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항구적인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어떤 때는 정부가 시민 영역으로 더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 어떤 때는 후퇴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직접 개입으로부터 손을 뺀 지역에서, 특히 가난한 지역에서, 정부의 자원은 지방 단체들이 넘겨받거나 도입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주도와 관여를 촉진하여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은 가난한 공동체이다(Giddens, 1998: 132~133)

라고 부른다. 이런 점에서 사회투자국가라기보다는 시장투자국가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지도 모른다.

한편, 카메론은 큰 사회를 주장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을 우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국가의 능력을 사회적 필요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Norman, 2010: 4). 즉 큰 사회를 만드는 매개자가 적극적인 주체인 국가인 것이다.

카메론은 2009년 11월 10일에 행한 연설 서두에서 큰 정부론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영국 정부의 크기, 범위, 역할이 빈곤감소, 불평등과의 전쟁, 일반적인 보편적 안녕감의 증진 등의 진보적 목적을 방해했다. 큰 정부는 사적·사회적 책임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국가가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증가시켰다는 것은 역설이다”(Cameron, 2009a). 이런 관점에서 그는 “빈곤, 불평등, 사회적 파괴와 불의와의 싸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국가행동에서 사회행동(from state action to social action)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전환을 돕는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바란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we must use the state to remake society”(Cameron, Speech, 2009a). 이상에서 보듯이 큰 사회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의 조직화에 뛰어 들 것을 강조한다. 은행, 조직가, 조직 등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간여할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모두 자본주의와 시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향한다. 한번 시장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큰 사회론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점에서 큰 사회론이 구상하는 이상형의 국가는 큰 사회 지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자 간의 유사성은 보다 근본적으로 양자가 모두 경제성장과 시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3의 길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계급이나 계층, 착취, 이윤 동기가 미치는 영향, 초국적 기업들의 위력, 분업, 자유시장의 허상, 소비자사회에서의 소외” 등의 내용이 없다(Hamilton, 2011: 194, 196). 따라서 두 관점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제3의 길은 진보

주의에 쫓겨 대고 대처리즘을 쳐다본다는 점에서 공공영역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동체 회복 정책들은 공공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개방적인(open) 공공 영역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민주화를 공동체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통로이다”(Giddens, 1998: 138). 또한 제3의 길은 큰 사회론보다 시민사회의 개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다. “시민사회가 몇몇 사람들이 단순하게 상상하듯 자발적인 질서와 조화의 원천은 아니다. 공동체 회복은 그에 따른 문제와 긴장을 낳을 수 있다. 마을의 자율 방법대는 어느 만큼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 지역 운동 단체들이 공동체의 미래에 관하여 의견을 전혀 달리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하나의 ‘공동체’가 끝나고 또 다른 공동체가 시작되는 경계는 누가 설정하는가? 정부는 이러한 질문을 비롯하여 그 밖의 어려운 질문에 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는 또한 시민사회에 늘 내재하는 이익의 상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로 넘어 갈 수 없다. 즉 ‘국가가 어디에나 있다면, 국가는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Giddens, 1998: 138~139).

한편, 보수주의에 쫓겨 대고 있는 큰 사회론은 일국보수주의에로 회귀한다. 즉 “사회의 분열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정부정책은 우리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하나의 국가 혹은 통일된 공동체를 창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광범위한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보다 선호된다”(Taylor, 2008: 183). 따라서 지역사회는 자원봉사와 기부에 의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BBC News, 2011).

이상에서 보듯이 두 이념은 메두사처럼 블레처리즘이라는 동일한 몸통에서 나온 두 머리일 수 있다. 이들의 목적은 모두 개인의 자발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고 자본주의의 선용과 상품화를 위해 국가의 역할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레임의 정치의 틀을 통해 볼 때, 같은 목적과 전략을 블레어는 시장투자국가로, 캐머론은 큰 사회

지원국가로 명명한다. 즉 양자 간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아니라 일종의 제품 차별화”(Hamilton, 2011: 205)로서 삼쌍둥이들의 차별화 전술의 결과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정치적 대안은 상품화의 정치, 블레처리즘 지형, 앵글로색슨 모델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과연 사회를 회복시킬 것인가. 두 전략이 모두 탈상품화가 아닌 상품화와 재상품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의 회복이 기보다 시장회복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공동체를 탈상품화의 조건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개인과 가족의 책임감과 경제적 동기에 맡기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두 이념은 플라니가 말한 이중운동의 거점으로서의 사회가 아닌, 시장과 재상품화를 위해 활성화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아닌 대처주의에 더 가까운 제3의 길과, 사회를 튼튼히 해서 시장자유주의로 질주하고자 했던 큰 사회론은 그 자신들이 비판하고 극복해서 떠나 왔던 수동적이고 파편적인 공동체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Abstract

The Similar Welfare Politics and Community Vision  
of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Yoo, Bum-Sang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Third Way of the Labour Party and Big Society of the Conservative Party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British society. The Third Way has criticized the First Way, social democracy, and the Second Way, neo-liberalism and asserts that it is a new ideology. On the other hand, Big Society regards the Third Way as social democracy based on big state and its suggestion can save the British society to be isolated, distrusting, unengaged because of the Third Way. As expected by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is it true?

This study's results prove that they belong to Blatcherism which is a complex of Thatcher's and Blair's ideas. In other words, they pursue commodification politics based on market liberalism. If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he Third Way aims at re-commodification with social investment state whereas Big Society helps neo-liberalism with big society support state which establishes a base of social support. Likewise, the both of the Third Way and Big Society as the Siamese twins are the same in a direction of strategy but different in tactics and means for the goal.

Keywords: the third way, big society, social investment state, Butskellism, Blatcherism

##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385~401.
- 김상수. 2008. 『보수와 진보 이념을 넘어선 영국의 현실 정치』. 책세상.
- 김홍수영. 2010. 『영국의 거대한 기획, Big Society』. 《자활동향》, 5호.
- BBC News. 2010. “David Cameron launches Tories’ ‘big society’ plan.” BBC News UK Politics.
- \_\_\_\_\_. 2011. “Big Society is my mission, says David Cameron.” BBC News UK Politics. 14 Feb. 2011.
- Beech, M. 2009. “Cameron and Conservative Ideology.” in Lee, S. and Beech, M. (eds.). *The Conservatives under David Cameron: Built to Last?*. Palgrave.
- Berman, S. 2010.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정치가 우선한다』. 김유진 (역). 후마니타스; *The Primacy of Politics: Social Democracy and the Making of Europe’s Twentieth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binet Office. 2010. “Building a Stronger Civil Society: A Strategy for Voluntary and Community Groups, Charities and Social Enterprises.”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1a. “Big Society Capital: Finance in the service of society.”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1b. “Big society-Overview.”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1c. “The Big Society Bank launched.”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1d. “The Big Society Bank Outline Proposal.”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1e. “The Big Society Capital.”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1f. “Giving White Paper.” London: Cabinet Office.
- \_\_\_\_\_. 2012. “Building the Big Society.” [http://www.cabinetoffice.gov.uk/sites/default/files/resources/building-big-society\\_0.pdf](http://www.cabinetoffice.gov.uk/sites/default/files/resources/building-big-society_0.pdf).
- \_\_\_\_\_. 2012. “Francis Maude speech on Big Society and Localism.” London: Cabinet Office.
- Cameron, D. 2006. “Modern Conservatism.” *Speech at Demos*, London 30 January.
- Chomsky, N. 1999.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강주현(역). 모색; *Profit over the people: Neoliberalism and global order*, Seven Stories Press.
- Conservative Party. 2010a. “Big Society not Big Government.” [http://www.conservatives.com/News/News\\_stories/2010/03/Plans\\_announced\\_to\\_help\\_build\\_a\\_Big\\_Society.aspx](http://www.conservatives.com/News/News_stories/2010/03/Plans_announced_to_help_build_a_Big_Society.aspx).
- \_\_\_\_\_. 2010b. “The Conservative Manifesto 2010.”

- <http://www.conservatives.com/manifesto>.
- Conservatives. 2005. "Cameron calls for modern compassionate Conservatism." London: The Conservative Party.
- Carmeron. 2008. "Fixing our Broken Society." *Speech at Glasgow*, 7 July.
- \_\_\_\_\_. 2009a. "speech." 11 October.
- \_\_\_\_\_. 2009b. "The Big Society." The Conservative Party.
- \_\_\_\_\_. 2010a. "Our 'Big Society' Plan." The Conservative Party.
- \_\_\_\_\_. 2010b. "Our Big Society Agenda." The Conservative Party.
- Dixon, Keith. 2003. "블레어주의의 이데올로기 원천으로." in 『보이지 않는 <제3의 길>』. 바리아시옹편집위원회 (편역), 사회와 연대; *L'introuvable "troisieme voie"*. Variatons·I.
- Driver, S. 2009. "Fixing Our Broken Society: David Cameron's Post-Thatcherite Social Policy." in Lee, S. and Beech, M. (eds.). *The Conservatives under David Cameron: Built to Last?*. Palgrave.
- Elliott, F. and Hanning J. 2009. "Cameron: The Rise of the New Conservative." Harper Perennial.
- Erdal, David. 2011. "Employee ownership ... is it the future?" Director.
- Esping-Anderson, G. 2007.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 박시중(역). 성균관대 출판부;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vans, Kathy. 2011. "Big Society" in the UK: A Policy Review." *Children & Society*, Vol. 25, 164~171.
- Freedman, R. 2002. 『영국정치론』. 장원석 (역). 제주대학교 출판부.
- Friedman, M. 2007. 『자본주의와 자유』. 심준보·변동열(역). 청어람미디어;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eorge, V. and Wilding, P. 1994. *Welfare and Ideology*. London: Pearson Education Limited.
- Giddens, A. 1998. 『제3의 길』. 한상진·박찬욱(역). 생각의 나무; *The third way*, Polity Press.
- \_\_\_\_\_. 2007. 『이제 당신 차례요, Mr. 브라운: 영국 노동당이 다시 이기는 길』. 김연각 (역). 인간사랑; *Over to You, Mr. Brown: How Labour Can Win Again*, Polity Press.
- Glasman, M. 2010. "Society not State: the Challenge of the Big Society." Public Policy Research(June-August 2010).
- \_\_\_\_\_. 2010. "Society not State The challenge of the Big Society." *Public policy research*. Wiley-Blackwell.
- Grint, Keith. and Holt, Clare. 2011. "Leading questions: If 'Total Place', 'Big Society' and local leadership are the answer: What's the question?." *Leadership*, 7(1), 85~98.

- Hasan, Mehdi. and Macintyre, James. 2010. "There's no such thing as a 'big society'." London: NewStatesman.
- Hayek, F. A. 2006. 『노예의 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김이석(역). 자유기업원. 나남; *The Road to Serf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M Government. 2011. "Growing the Social Investment Market: A vision and strategy." London: HM Government.
- Hall, S. 1999. "무엇이 변했는가." in 『제3의 길은 없다』. 노대명 역. 당대; *Marxism Today*, Martin Jacques.
- Hamilton, C. 2011. 『성장숭배』. 김홍식(역). 바오출판사; *Growth Fetish*, Allen & Unwin.
- Jacques, M. 1999. "제3의 길을 해부하면서." in 『제3의 길은 없다』. 노대명 역. 당대; *Marxism Today*. Martin Jacques.
- Jordan, B. 2010. "Why the Third Way Failed: Economics, Morality and the Origins of the 'Big Society'." the Policy Press.
- Jordan, Bill. 2011. "Making sense of the 'Big Society': Social work and the moral order." *Journal of Social Work*, 1~17.
- Law, D. 2010. "22 Days in May: The Birth of the Lib Dem-Conservative Coalition." Biteback Publishing Ltd.
- Lee, S. 2009. "Introduction: David Cameron's Political Challenges." in Lee, S. and Beech, M. (eds.). *The Conservatives under David Cameron: Built to Last?*. Palgrave.
- Lee, S. and Beech M. 2009. "The Conservatives under David Cameron: Built to Last?" Palgrave.
- Marlière, Philippe. 2003. "노동당에서 신노동당으로-사회민주주의와 분열의 계단계." in 『보이지 않는 <제3의길>』. 바리아시옹편집위원회 (편역). 사회와 연대; *L'introuvable 'troisième voie'*. Variatons-I.
- NewStatesman, 2011. "The 'big society' is unworkable in the age of cuts." *New Statesman*, 14, Feb. 2011.
- Norman, J. 2010. "*The Big Society: the Anatomy of the New Politics*." University of Buckingham Press.
- Osborne, P. 2009. "Foreword." in Lee, S. and Beech, M. (eds.). *The Conservatives under David Cameron: Built to Last?*. Palgrave.
- Patel, R. 2009. 『경제학의 배신: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제현주(역). 북돋움; *The Value of Nothing*, Portobello Books.
- Polanyi, K. 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역). 길.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eacon Press.
- Stone, Chris. and Millan, Anne. 2011. "Empowering Communities in the 'Big Society'-Voluntarism and Event Management Issues at the Cheetham Hill

- Cross-Cultural Festival.”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Cases*, 242~250.
- Taylor, G. 2008. 『이데올로기와 복지』. 조성숙(역). 신장; *Ideology and Welfare*, Palgrave Macmillan.
- Trades Union Congress. 2011. “Cuts to the voluntary sector make a mockery of the ‘Big Society’, say TUC.” TUC.
- UNISON, 2010. “Big Society-Big cop out-Warns Unison.” UNISON.
- Wahl, A. 2012.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남인복(역). 부클; *The Rise and Fall of Welfare State*, Poluto Press.
- Wallerstein, I. 1995. 『역사적 자본주의』. 나종일 외(역). 창작과비평사; *Historical Capitalism*, Verso.
- Wiggins, Kaye. 2010. “Coalition outlines plans for big society programme.” ThirdSector. Wikipedia(2012.3.5 검색), Butskellism, <http://en.wikipedia.org/wiki/Butskellism>